

정부, 유가대책비 지방 전가 ... 지방 확대 논란 재연

'지방 살리기' 없는 국정 쇄신책은 허사

지방 정책 전문가·담당자 거의 없어

중앙위주 논리만 반복 ... 경쟁력 약화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세우면서 이번에도 유가 대책비 일부를 지방 재정에서 부담하게 해 이명박 정부의 '지방 외면'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민영화와 혁신도시 축소, 수도권 규제완화, 예산 10% 절감에 따른 지자체 사업 차질 등으로 '지방 확대' 정책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에 단행할 국정 쇄신책에 지방을 살릴 방안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정부 지방외면 왜? =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은 국가 균형발전을 기치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놓은 참여정부의 지방 정책들이 대부분 폐기 또는 수정·축소하면서, 불가피하게 '지방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 재정력이 높은 수도권 위주로 정책을 세우다 보니 사정이 열악한 다른 지방에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중앙 위주의 논리가 이 정부 내에 광배해 있으며 지방정책의 전문가나 정책 담당자가 거의 없어서는 지지도

있다.

지방정책을 담당하는 인사들의 면면도 이해하기 힘들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표적인 중앙집권주의자로 꼽힌다. 지방정책의 컨트롤타워격인 박승준 국정기획수석도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건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하며 "새 정부가 구상하는 광역경제권은 신자유주의 시대 경쟁논리를 반영하는 '승자독식의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균형발전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혁신도시 축소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은 참여정부의 대표적 지방 정책.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 정책에 메스를 댔다. 공공기관 민영화를 통해 혁신도시 건설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정부 당국자는 예정대로 혁신도시 건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민영화는 진행되면 혁신도시 축소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 수도권 규제 완화는 대선 때부터의 공약.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방의 반발을 무릎 쓰고 이를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투자 성과에만 급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단기적 투자 유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

권 정비계획법의 후퇴 또는 무력화"라며 "그동안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 온 현상을 그나마 통제하고 있던 것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인데, 이마저도 무력화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오수열 조선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무조건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을 부인하는 데서 벗어나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는 분권형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이번 국정 쇄신책에 이런 정책들이 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고기 해법 가지고 올라 한나라당 황진하 단장 등 쇄고기 대책 미국 방문단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개월 이상 쇠고기 자율 규제 美 정부 보장 여부가 최대 관건

■ 방문단 방미 해법 논의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미국산 쇠고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수석과 공무원,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정부 및 의회, 축산업계와 해법을 의논한다.

그러나 우리측이 기대하는대로 미국측이 정부 차원에서 문서 등을 통해 명확히 '30개월이상 쇠고기 자율규제'의 실행을 보장해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이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할 경우 문제가 더욱 꼬일 위험도 있다.

◇양·정·정 줄줄이 미국행 = 정부는 박태배 농식품부 제2차관과 최중현 외교부 지역통상국장, 농식품부 김창식 동물방역팀장과 허송무 사무관 등 4명의 대표단을 9일 오후 미국에 파견했다.

정부 공식 대표단과의 동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역시 같은날 미국

출발집회 등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美 정부 30개월 유통표시 보장 이 관건 =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국 정·관계와 접촉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내부의 심각한 분위기를 정확히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차원의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차관, 외교부 국장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까지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 대표단은 미국 정부와 쇠고기 해결 방안을 놓고 실질적으로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다.

협상의 초점은 30개월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미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지 여부다.

국내 육류수입업체에 따르면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70여곳을 포함, 600여개 관련 업체들은 이번주 초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하지 않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 가운데 한국 수출이 가능한 30여개 업체 가운데 대부분인 28~29곳도 '30개월 유통표시(라벨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상대로 조만간 미국 수출업체와 한국 수입업체가 "30개월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결의문이나 각서 등의 형태로 교환한다해도 이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될지 여부, 즉 실효성 문제가 남는다. 이 부분은 두 나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의 경우 수출검역증명서에 반드시 '30개월 이상' 여부를 표시하겠다고 약속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과연 미국 정부가 사실상 지난 4월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정 내용을 뒤집고 한국 쇠고기 수출을 위한 별도의 유통 구분 시스템까지 가동해줄지, WTO 국제통상 규범 위반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같은 약속을 문서로 남겨 자율규제에 공식적으로 개입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농식품 차관·靑 안보수석 등 미국행

한국 분위기 등 전달 美 협조 구할 듯

을 방문한다.

이들은 미국에 3~4일 정도 머물면서 미국 농무부(USDA)나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이 구두로 약속한 '30개월 쇠고기 교역 금지'를 뒷받침할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전화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한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한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 바 있다.

여당도 쇠고기 정국 타개를 위해 대거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황진하, 윤상현, 권택기, 이달근 의원 등 한나라당의 이른바 '쇠고기 대책 미국 방문단'은 9일 오전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이양호 농무관(농식품부 소속)의 안내를 받아 오는 12일까지 미 백악관과 국무부·USTR·농무부·상무부 고위 관계자, 상원 농업위원회 및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축산업자들과 차례로 만나

■ 실행까지 갈 길 먼 '고유가 대책'

정부가 한나라당이 지난 8일 고유가종합대책에 합의, 10조5천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책 대부분이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것들이어서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또 수혜대상을 인적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지원을 받는 중복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적자 고유가를 맞아 세금 부담이 커진 사람들은 거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반면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환급금·보조금·추경, 국회 안 열리면 허사 = 정부와 여당이 지난 8일 발표한 10조5천억원 상당의 고유가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추경경정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나 추경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은 집행될 수 없다.

근로자·자영업자·사업용 차량(대중교통·물류)·농어민에 대

법률 개정·추경 필요 ... 국회 안 열리면 혼란

수혜대상 중복 지원·형평성 문제도

해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과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등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 절약구조와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모두 6개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대책 집행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4조5천억원의 세계잉여금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

◇중복 지원·형평성 논란 = 이번 대책이 서민층을 주로 수혜대상으로 하기는 했지만 맞벌이 부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

어 실질적인 고유가 고통을 헤아렸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부부가 각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의 가구소득을 올리는 가정에는 각각 24만원씩 48만원의 환급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기준선인 3천600만원을 갓 넘는 출발이 가정에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중복지원 문제도 논란거리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인 약 2만원, 즉 연간 24만원을 받는 것 외에 근로자 유가환급금도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차를 소유한 영세사업자도 10만원 상당의 경차 보조금 외에 유가환급금 2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주)세종투어
062) 222-2209

세종투어 여행사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알차고 특별한 6월 여행

강력추천

SEJONG TOUR
TRAVEL AGENCY

HAPPY SUNDAY~제주TOUR!!

1박2일 - ₩139,000 (매)

보안여행

대형항공기 무료 대박은
방콕 / 아스타 / 라스베이거스 / 장판여행

₩599,000 (매)

**대중교통이든기차든
여행의 즐거움**

Welcome, 1 ₩369,000

Welcome, 2 ₩379,000

Welcome, 3 ₩389,000

제주권유도 TOUR!!

1박2일 - ₩179,000 (매)